

# 해방 이후 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실적 종합평가

김 석 진\*

- I. 서론
- II. 북한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 III. 경제위기와 경제체제의 변화
- IV. 결론과 전망

## 요 약

70년 전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대체로 경제적 실패를 경험하였다. 북한은 계획경제와 자립경제의 이상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허술하고 무계획적인 명령경제를 운영했을 뿐이며, 결국 낙후하고 고립적이면서도 원조의존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1990년대 들어 북한경제는 결정적 위기에 빠졌는데, 소련의 원조성 무역 중단과 자연재해가 그 주된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일성 사망 이후 독재체제의 경제적 통치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도 중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영 계획경제가 허물어지고 난 후, 많은 북한주민과 일부 관료들이 공식 제도와 이념을 위반해 가며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었으며, 그 결과 시장화와 사유화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체제의 이러한 성격 변화와 대외경협의 확대 덕분에 2000년대 초 이후에는 비록 느리게나마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장하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사경제와 시장의 활력이 충분히 발휘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북한경제는 앞으로도 기껏해야 저성장 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오늘날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격차는 경제체제가 경제실적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걸어간 남한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북한은 최빈국 수준에서 헤매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옛 사회주의 나라들 대부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다가온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가 어떻게 실패했고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정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정적 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오늘날 북한 체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최근의 경제실적은 어떠한지,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자신 있는 분석을 내놓기는 힘들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 중 하나로 과학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적 편견과 막연한 추측으로 북한의 실상을 오해하게 될 소지도 크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경제의 장기적 궤적에 대해 흔히 퍼져 있는 통념과는 다소 다른 역사적 평가를 제시한다.<sup>1)</sup> 일반적 통념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실적,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측면에 대한 평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정적 위기가 발생하기 전,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 북한경제에 대한 통념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나라들보다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과 더 비슷했다고 본다. 이런 해석에 의하면, 북한은 정교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1) 이 글의 주요 논지 중 일부는 다음 논문들로 이미 발표된 바 있다. 김석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주: 한울, 2014), pp. 155~182; 김석진,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전망,” 김수행·신정완 편,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 155~172. 이 글에서는 필자의 과거 논문들에 비해 경제체제 관련 논의를 대폭 보완하고 경제체제와 경제실적을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구축했고 중진 산업국의 위치를 확보했으며, 그 결과 아마도 1970년대 전반까지는 남한보다 소득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북한의 계획경제가 실제로는 매우 허술했고 산업화는 초보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었을 뿐이며, 북한의 소득수준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남한보다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가기 어렵고, 따라서 경제실적도 계속 나쁜 상태에 머물 것이며, 결국에는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체제 붕괴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된 평가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일반주민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루어냄으로써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졌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체제는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시장화와 사유화,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체제 변화 정도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성공적인 개혁·개방 사례에 비하면 훨씬 미진하다. 하지만 비록 덜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옛 소련 및 동유럽과도 다르고,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다른 제3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크다.

이런 추세가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지, 북한 체제의 최종 도달점이 어디일지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북한 정권의 정책, 남한 및 주변 강대국의 대북정책,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상황이 어우러져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미생(未生)’상태에 있으며 북한의 앞날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존의 통념과 정치적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 II

## 북한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 1.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 북한의 경제실적

## 가. 198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실적에 대한 통념

북한은 잘못된 체제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결과 경제 파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이런 통념은 또 하나의 중요한 통념, 즉 1970년대 전반까지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이 남한보다 높았다는 평가와 쉽게 부합되진 않는다. 북한경제가 초기 수십 년 동안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 평가였는데, 이런 통념은 북한경제의 실패가 분명해진 오늘날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다.<sup>2)</sup>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통념을 연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분단 당시 북한경제가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북한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및 산업 기지로 육성했으며, 그 결과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남한보다 훨씬 높았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북한경제가 초기에 잘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6.25 전쟁 기간 중에 미군의 ‘전략적 폭격’ 정책에 따라 북한의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지역에서 일하던 산업 및 기술인력 중 다수가 전쟁 중에 전사했거나 남한으로 이주하여 전쟁 후 북한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상당히 산업화된 경제였던 북한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한과 비슷한 전통적 농업경제로 후퇴해 버린 것이다.

북한경제의 초기 실적이 좋았다는 통념을 뒷받침한 또 하나의 근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강행 성장(forced growth)’을

2) 이런 평가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문헌으로는 전홍택·박진, “북한 경제발전의 역사적 평가,” 차동세·김광석 편,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참조.

이루기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옛 사회주의 나라들은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주류 사회과학자들도 사회주의 정치의 비민주성과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도 경제성장 및 국력 증대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자 사회주의 경제의 성장실적에 대한 과거의 일반적 인식이 상당한 과대평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저소득 개발도상국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 것은 맞지만, 성장 속도는 과거에 흔히 추측하던 것보다 한결 느렸으며, 소득수준과 소비수준도 이제까지 알려져 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sup>3)</sup>

## 나. 북한 성장실적의 재평가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북한의 초기 성장실적이 아주 좋았다는 과거의 통념은 사회주의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과대평가와 더불어 북한당국이 발표한 공식통계의 무비판적 활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정부 및 한국 정부 기관들과 연구자들은 북한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했으며, 이런 자료를 근거로 1970년대 전반까지 북한의 성장실적이 대단히 좋았고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보다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입수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성장실적을 재구성해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성장률은 1950년대 중후반에만 연평균 9%의 좋은 실적을 기록했을 뿐이며, 1960년대 초 이후에는 연평균 3%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sup>4)</sup>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은 훨씬

3) 예를 들어 소련의 경우를 평가한 Abram Bergson, "How Big Was the Soviet GDP?,"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39, Issue 1 (Spring 1997), pp. 1~14 참조.

4)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 No. 3 (September 2007), pp. 564~582.

더 낮아서 1950년대 중후반에 연평균 6%, 1960년대 초 이후에는 연평균 1%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의 소득수준이 역전된 시기는 과거의 통념보다 훨씬 빠른 1960년대 중후반 무렵이 되며, 1980년대 말에는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대안적 추정이 타당하다면,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성장실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 및 개발도상 국가의 평균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나라들보다 노동력과 자본을 더 빠른 속도로 더 광범위하게 동원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성 향상 실적은 더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성장 둔화 현상이 더 일찍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북한의 성장실적은 1950년대 중후반의 예외적 성공을 제외하면, 기껏해야 평범했거나 오히려 열등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 계획경제의 실상

### 가.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 북한의 경제제도와 정책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 북한의 성장실적이 과거에 흔히 생각하던 것보다 한결 나빴던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경제체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과거의 통념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은 어떤 것이었을까? 경제체제와 정책은 경제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통념은 북한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 나아가서 그러한 체제를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보다 더 철저하게 추구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주된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본과 토지의 국유 또는 공유제도로써,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생산조직은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으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는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으로서, 주요 경제활동이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고 지시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체제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북한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비롯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5)</sup> 북한당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하기도 전인 1946년에 주요 기업체들을 국유화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 중후반에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즉 국유화)와 농업 집단화를 실시하여 협동농장/국영농장으로 구성되는 농업관리제도와 사실상 전 주민을 포괄하는 식량배급제도를 수립하였다. 이어서 1961년의 ‘대안의 사업체계’와 1965년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정책을 통해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른 산업관리제도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조선노동당’이 지도하는 관료조직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당국이 추진한 경제정책도 역시 소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나라에서 흔히 추진되었던 것과 비슷했지만, 이를 더욱 철저하고 더욱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노동력 투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중동원 정책이고, 둘째는 자본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공업 우선 노선’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기 위한 ‘강행 성장’ 전략의 주된 구성부분이다. 세 번째 정책은 ‘자립경제’ 노선이다. 본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대외무역을 제한하고 자립경제를 추구하려는 속성을 갖게 마련이다. 국내 경제활동에 비해 외국과의 거래는 계획과 통제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강한 민족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자립경제라는 이상을 더 철저하게 추구하려 했다. 네 번째 정책은 ‘경제·국방 병진노선’, 즉 군수산업에 많은 자원을 쏟아 붓는 정책이다. 이것 역시 냉전 시대에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북한은 남한 및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남한에 비해 훨씬 적은 인구 규모 때문에 훨씬 더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져야 했다.

## 나. 계획경제의 실상과 경제정책의 실패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정책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려 했던 북한당국의 시도는 성공했을까? 북한의 경제체제는 당국이 의도한 대로 움직였을까? 당국이

5)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서울: 선인, 2005).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간결한 설명으로는 이석, “경제: 변화와 지속,” 체제통합연구회 편, 『북한의 체제와 정책: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지속』 (서울: 명인문화사, 2014) 참조.



추진한 경제정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을까? 북한경제의 실상을 상세하게 조사한 여러 연구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한다.<sup>6)</sup>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었고, 이런 현상이 계획 시스템이 성립한 1960년대 초부터 장기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실상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기보다는 “무계획 명령경제”에 가까웠으며, “상호 고립된 경향을 갖는 지역경제의 집합체”, 다시 말해 “중앙계획에 의해 각 지역이나 부문이 밀접하게 결부된 경제가 아니라 자급자족도가 높은(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경제단위로 구성된 경제”, 즉 “현저하게 전근대적인 특징을” 갖는 경제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sup>7)</sup> 이런 연구결과는 앞 절에서 본 북한 성장실적의 재평가, 즉 1960년대 초 이래 북한이 장기적 저성장 추세를 보였다는 평가와 잘 부합된다.

왜 북한의 계획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본래의 이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심각한 비효율성을 노정한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나타난 공통적 현상이었다. 옛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주류 경제학계의 연구는 그 이유를 ‘정보 문제’와 ‘인센티브 문제’의 두 측면으로 설명했는데, 그 중 두 번째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가 이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먼저 ‘과학적 계획자’가 국익, 즉 사회의 포괄적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이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각 부문, 지역, 업종, 계층의 이익은 서로 합치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공산당 간부에서 일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획을 위배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강력한 정치적 독재가 실행되어야 겨우 운영 가능한 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모든 옛 사회주의 나라들은 독재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6)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p. 189~242;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 278~308;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pp. 81~88, 363~377, 436~441, 446~448, 472~478;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해남, 2002), pp. 75~108;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서울: 해안, 2001), pp. 195~216 참조.

7) 기무라 미쓰히코, 위의 책, p. 212.



심각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적어도 수십 년 씩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 통치자를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의 강력한 독재체제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렇다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한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록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보다 계획경제를 더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강력한 독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고 통치자조차도 계획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 통치자는 자기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합치시키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전문적 관료기구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대로 모든 경제활동이 진행된다면,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권력자들은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한 자기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전에 수립된 계획과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은 ‘주석폰드’<sup>9)</sup>와 ‘현장지도’라는 방식으로 빈번하게 경제활동에 간섭하였으며, 이런 간섭은 북한경제의 비효율성과 무정부성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권력자의 이런 행태는 김일성이라는 최고 독재자만이 아니라 각 부문, 지역, 산업을 담당하는 ‘작은 독재자들’에 의해서도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계획경제의 이런 문제점은 왜 북한에서 ‘강행 성장’ 전략의 효과가 장기 지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종료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강행 성장 전략의 두 요소, 즉 대중 동원과 중공업 우선 노선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대중 동원에 의한 노동력 투입은 쉽게 물리적 제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 고도 성장을 달성하려면 자본 투자를 늘려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계획경제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애써 투자한 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유희자본이 되는 일이 흔해진다. 경제학의 전문 용어로는

8)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독재체제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고한 것이다. Paul R. Gregory,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9) ‘주석폰드’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조달을 지시한 물자를 가리킨다. ‘주석폰드’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pp. 203~207, 239~242 참조.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이 낮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sup>10)</sup> 자본이 노동을 잘 대체하지 못하면 급속한 자본 투자를 위한 중공업 우선 노선이 효력을 잃고 노동력 투입의 물리적 제약이 곧바로 경제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경제에 대한 여러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1)</sup>

북한 계획경제의 이런 문제점은 자립경제 노선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 자립 경제는 일반적으로는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뜻하지만, “대외무역을 하지 않고 필요한 물자를 모두 자체 조달하는 폐쇄경제, 즉 자급자족 경제”를 뜻하기도 한다. 북한당국이 추구한 자립경제는 두 번째 의미에 더 가깝다. 물론 완전 폐쇄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당국도 어느 정도의 대외무역은 실시하였다. 하지만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원천 자원만큼은 수입하지 않고 자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정책은 곧바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 자원은 석유인데, 북한에는 석유가 나지 않으므로 자립경제 노선을 강하게 추구하면 석유 없이 경제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되도록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를 건설했다. 북한에는 석탄(무연탄과 갈탄)이 제법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므로, 석유 대신에 석탄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sup>12)</sup> 즉 현대적인 석유화학 대신에 기술적으로 매우 낙후한 석탄화학 산업을 건설하고 석탄과 수력에만 의존하는 전력 공급체계를 만들었으며, 전력으로 움직이는 철도 중심 수송체계를 수립하고 여타 산업에서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을 채용했다. 석탄 중심 경제는 석유 중심 경제에 비해 훨씬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낭비가 심했으며 품질이 나쁜 제품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북한의 석탄은 본래 품질이 나쁘고 광산의 채굴조건도 열악했기에 무리한 증산이

10)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체탄력성이 1 근방인 데 비해 옛 사회주의 경제에서 대체탄력성은 1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 경제의 경우에 이 점을 실증한 문헌으로는 Martin Weitzman, “Soviet Postwar Economic Growth and Capital-Labor Substit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 4 (September 1970), pp. 676~692 참조.

11) 각주 6번의 여러 문헌 참조.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북한의 실상을 정리한 문헌으로는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pp. 169~173 참조.

12) 내부 자원에 기초한 북한식 산업화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이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오원철, “북한경제 망한 까닭,” 『신동아』 (1995년 1월호), pp. 148~171.

계속되자 비용 증가, 생산성 및 품질 저하 등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 때문에 북한당국도 1970년대에 소련과 중국의 원조, 그리고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도입을 통해 정유공장, 석유화학 공장, 비료 공장들<sup>13)</sup>을 건설하면서 부분적으로 석유 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석유는 소련과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조달하였다.<sup>14)</sup> 자립경제라는 이상은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좌절되고 경제의 중요 원천 자원 중 상당 부분을 강대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석유 경제로의 부분적 이행 이후에도 수출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 원조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분단체제에 따른 과중한 군사비 부담도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약한 중요 요인이었다.<sup>15)</sup> 북한은 인구 규모가 남한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군사비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무기 생산을 증대시킴에 따라 기계설비 등 자본재 생산이 어려워졌다. 둘째, 군수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부문에서 원자재, 중간재, 에너지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계획 시스템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셋째, 대다수 청년 노동력이 군에 복무하게 됨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넷째, 많은 시설이 전쟁에 대비해 지하에 건설되거나 입지여건이 나쁜 후방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자재와 노동력의 낭비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여러 세심한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 북한경제는 과거에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훨씬 나쁜 실적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전통적 농업경제에서는 겨우 벗어났으나 중진 산업국에는 이르지 못한 채 장기간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립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냈으나 결국 원조 의존적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13)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2010』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pp. 373~381.

14)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 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p. 53~88.

15) 군사비 부담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이 문단의 설명은 김석진,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전망,” pp. 168~169 부분에서 가져왔다.

## III

## 경제위기와 경제체제의 변화

## 1. 1990년대 경제위기와 그 원인

## 가.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통념

1980년대 말까지 북한경제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영 계획경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했고 일반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제 파탄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의 결정적 위기에 빠졌으며, 적어도 수십만 명이 아사한 대기근까지 경험하였다. 한 때 중진 산업국으로 여겨졌던 북한의 경제위기와 대기근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왜 북한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까? 널리 퍼져 있는 통념은 그 이유를 외부적 충격과 자연재해에서 찾는다. 외부적 충격이란 북한의 주요 후원국이었던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소련의 원조성 무역이 1991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사태를 가리킨다. 이어서 1995년과 96년에 연이어 발생한 대홍수는 북한 농업의 파탄과 대기근을 불러온 주범으로 꼽힌다. 이런 통념은 틀린 것은 아니며 북한의 경제난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의 경제위기가 그렇게까지 심각했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 점 중 하나는 결정적 위기의 발생 시점이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경제에 대해 알려져 있는 여러 자료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소련의 원조성 무역이 급감한 1991년보다는 1994-95년 무렵에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6)</sup> 또 대홍수가 발생한 1995년 여름보다 훨씬 전인 1994년 중반 무렵부터 이미 대기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sup>17)</sup> 결정적 위기의 발생 시점이 1994-95년이었다는 이런 이해가 타당하다면,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통념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16)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pp. 227~230.

17)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7~29.

또 하나 중요한 의문은 식량배급제도의 붕괴에 관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는 1994-95년 무렵에 사실상 무너졌으며, 이것이야말로 전통적 국영 계획경제 전체가 파탄에 빠지게 된 결정적 근인(近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배급제도는 왜 무너졌을까? 쉬운 추측은 식량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식량배급제도는 식량이 충분해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며, 식량공급이 줄어들수록 더욱 열심히 지켜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저발전 단계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식량배급제도는 농민들이 생산한 식량 중 상당 부분을 공출하여 국영 계획경제의 주요 기반인 도시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때문에 식량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공산당 정권은 농민들에게서 강제로 식량을 빼앗아 도시주민에게 배급했다. 1930년대 초 소련에서, 그리고 1950년대 말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근에서도 주된 희생자는 농민들이었으며, 도시주민들은 부족하나마 계속 배급을 받아 아사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대기근에서는 도시주민에 대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민보다는 도시 주민들이 더 심한 피해를 입었다.<sup>18)</sup>

## 나.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적 가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북한의 결정적 위기를 가져온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북한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기 힘들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설은 결정적 위기의 발생 시점이 김일성 사망 직후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치적 독재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렵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통치력은 독재자의 평판, 즉 독재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독재자에 대한 대중의 공포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독재자의 유고 사태 또는 독재자의 평판 저하는 독재체제의 정치적 기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계획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sup>19)</sup>

18) 위의 책, pp. 107~134.

19) 마크 해리슨은 페레스트로이카 말기 소련 경제의 위기를 이러한 정치적 가설로 설명한다.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정치적 자유화 정책이 독재자의 평판과 독재체제의 정치적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Mark Harrison, "Coercion, Compliance,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Command Econom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5, No. 3 (2002), pp. 397~433.

이런 관점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1994년 여름 김일성의 사망이 북한 독재체제의 기강, 나아가서 국영 계획경제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아닐까? 기존의 통념은 김정일이 오랫동안 후계자의 위치를 지켜 왔기 때문에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무리 없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북한 독재체제의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 대다수 북한 사람들은 각자의 소속 직장에서 공식 제도와 이념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각자 살 길을 찾아 요령껏 살기 시작했다.<sup>20)</sup> 협동농장에서는 국가에 상납해야 할 식량을 숨기고, 식량 구매와 수송 및 배급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를 담당한 관료들은 국가 전체 관점의 효율적·합리적 배분보다는 각자 자기 지역, 부문, 기업, 궁극적으로는 자기 개인 몫을 챙기기에 바빴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에 이어 최고 독재자가 된 김정일은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정말로 북한 독재체제의 통치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면, 설령 1990년대 중반의 비상 상황에서는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된 2000년대 이후에는 본래의 체제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의 북한 체제가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북한당국이 본래의 체제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당국의 통치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시사한다.

북한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적 가설이 갖는 한 가지 문제점은 정치적 자유화나 정치적 저항처럼 통치체제의 균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고 독재자에 대한 개인숭배, 기존 정권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 정치적 억압과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독재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째서 경제적 통치기능은 그렇게 심하게 약화되어 버렸는지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20) 1990년대 경제 위기의 시대에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증언이 있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좋은 벗들 엮음,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서울: 정토출판, 2000) 참조.



## 2. 최근의 체제 변화와 경제 실적

### 가. 시장화와 사유화의 진전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북한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북한 체제의 정체는 무엇일까? 최근의 경제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들에 대한 통념적 이해와 학계의 논의는 모두 혼란스럽다.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은 대체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쳐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는 옛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걸어난 길, 즉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기존 체제를 급진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넘어간 경우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 베트남이 걸어난 길, 즉 공산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장기간에 걸쳐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넘어간 경우다. 오늘의 북한은 두 가지 경로 중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정권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제까지 실시한 정책은 개혁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반적 통념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인가? 북한에 대해 널리 알려진 소식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기 어려워진다.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가 크게 진전되어 많은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식 직장에서 얻는 소득보다 시장 활동을 통해 얻는 비공식 소득이 훨씬 많다는 소식이 흔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주민만이 아니라 국영 기업과 국가기관들도 시장 활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최고 통치자와 고위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는 특권적 기관과 기업들(그 중 특히 무역회사들) 이야말로 시장 확대의 주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sup>21)</sup> 이런 인식이 타당하다면 오늘의 북한은 더 이상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21) 주로 정치학자들이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문헌의 서베이와 경제학적 관점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pp. 207~225 참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통념과 북한이 시장경제라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을까? 이를 양립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시장경제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시장경제’와 ‘나쁜 시장경제’<sup>22)</sup>를 구분한 다음, 오늘의 북한은 나쁜 시장경제가 되었을 뿐, 좋은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이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혁과 개방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들이 자기들만의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 시장경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인식은 일반적 통념보다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훨씬 더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통념에서는 북한이 세계 대부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가 되었다고 선뜻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 통념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으며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시장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기본 성격은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시각도 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라는 관점도 있으며, 두 가지 특성이 섞여 있는 혼합체제라는 시각도 가능하다. 북한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관점 중 어떤 것이 더 옳은지를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문제는 실증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론과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만한 여지도 크다.

시장화 수준의 평가에서 제기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당이나 군부가 운영하는 국영 무역회사의 수출 활동(‘외화벌이’)이 계획 활동인가, 시장 활동인가 하는 점이다.<sup>23)</sup> 북한 무역회사가 수출품을 해외시장(주로 중국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판다는 점, 수출품 생산 활동에서 종종 개인 사업가를 활용한다는 점, 수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 중 일부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기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반면 대외무역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국영회사들

22) 이와 비슷한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William J. Baumol, Robert E. Litan, and Carl J. Schramm, *Good Capitalism, Bad Capitalism, and the Economics of Growth and Prosper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23) 북한 대외무역의 제도적 성격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pp. 129~175;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2012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자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pp. 635~678;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pp. 213~237 참조.

에게만 허용된다는 점, 흔히 ‘워크’라고 부르는 무역면허 및 쿼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상부에 상납해야 하며 상납금액을 계획 지표로 하달받는다든가, 수출 원천이 되는 주요 자산(예를 들어 광산)이 국가 소유이며 이들에 대한 통제권이 정치적으로 배분된다는 점 등을 중시하면, 북한 국영 무역회사들의 외화벌이는 시장경제보다는 계획경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북한경제가 사실상 시장경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관점은 계획경제라는 개념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북한의 국영경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단일한 계획기구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고 지시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계획경제가 아니라는 논법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경제학계의 표준 이론은 계획경제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정의하지 않는다.<sup>24)</sup> 비교경제체제론을 전공한 경제학자들은 소련과 중국 등 대부분 사회주의 나라들의 계획경제가 계획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실제로는 ‘계획되지 않은’ 활동의 비중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발견하였다.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활동, 예를 들어 국영기업 간의 수평적 거래 같은 행위를 시장경제 활동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거래는 관료들 간의 교섭으로서 시장거래라기보다는 ‘관료적 조정(bureaucratic coordination)’에 속한다고 보았다.

현실의 계획경제는 사전에 작성된 중앙집권적 계획대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라 최고 통치자에서 하급 관료에 이르기까지 관료조직 내의 여러 관료들이 다양한 수직적 명령과 수평적 교섭을 통해 운영하는 경제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명령경제(command economy)’ 또는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는 경제(centrally managed economy)’ 같은 용어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경제’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주의 경제를 통상적으로 계획경제라고 부르는 관행을 계속 유지한 것뿐이다. 이런 관행을 따르다면, 오늘날 북한경제 중에서 국영 부문, 즉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처럼 관료조직의 직접적 통제 아래에 있는 조직들의 활동은, 그들이 시장거래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계획경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4)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에 대한 표준적 설명으로는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91~130 참조.

오늘의 북한 체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시장화 수준을 평가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소유제도와 경제단위의 성격 변화인데, 북한경제에 대한 통념이나 학계의 논의에서 이 문제는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만큼의 정당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경제학계의 표준적 논의에 의하면,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본과 토지의 소유제도 또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이며, 다른 하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전자의 기준으로 볼 때, 사유제도와 사기업이 지배적인 체제는 자본주의, 국유제도와 국유(또는 국영)기업이 지배적인 체제는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후자의 기준으로 볼 때 시장 메커니즘이 지배적인 체제는 시장경제, 계획(즉 관료적 명령)이 지배적인 체제는 계획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체제전환이 진행될 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시장화’라고 부르지 않고 단지 ‘체제전환’ 또는 ‘체제이행(transition)’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경제체제의 구분 기준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체제전환 과정을 대체로 ‘안정화’, ‘자유화’, ‘사유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개혁의 결합으로 묘사했다.<sup>25)</sup> 이 가운데서 안정화는 체제전환국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에서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체제전환이란 자유화와 사유화의 결합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화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정착 과정을 의미하며, 사유화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포함하여 국유제도에서 사유제도로의 이행을 가리킨다.

이런 표준적 논의에 준거할 경우,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단지 시장화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유화라는 측면에서도 조명되어야 한다.<sup>26)</sup> 지난 20여 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단지 시장거래가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제도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 즉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농지의 경우, 협동농장 공동 경작지 외에 텃밭, 패기밭, 다락밭 등 다양한 형태의 사경지가 확대되었으며, 이런 사경지를 이용한 개인 농사가 활발해졌다. 도시주민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본래의

25) 가장 간결하고 표준적인 설명으로는 Stanley Fischer and Alan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Autumn 1991), pp. 91~105 참조.

26) 양문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체제전환 지표(transition indicators)를 이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수준을 평가한 바 있는데, 이 지표에는 사유화 수준도 포함되어 있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pp. 271~302.

소속 직장, 즉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을 아예 떠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적(籍)만 걸어 놓은 채 개인 장사를 하러 다니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개인 장사는 대개는 보잘것 없는 소규모의 생계형 활동이어서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유재산과 사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사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27)</sup> 더욱이 제법 큰 재산을 모아 상당히 큰 규모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본래 국유재산인 주택의 사유화 현상, 즉 사적인 거래와 사적인 건설 현상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북한의 사유화는 아직은 시장화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협동농장 농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토지가 여전히 국유이고, 중대형 국영기업(군수기업, 일반 중화학 및 경공업 기업 등), 철도, 전력, 주요 건물 등 주요 재산도 역시 국가 소유로서 관료조직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사유화되고 있는 재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국유재산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단, 국영기업의 명목과 자산을 빌린 사기업 활동, 즉 ‘붉은 모자를 쓴 자본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이런 활동이 활발해지면, 전체 재산에서 사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더라도 전체 GDP에서 사경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

결국 시장화와 사유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체제이행 과정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의 비중이 훨씬 높고 국영기업과 협동농장 등 사회주의적 경제조직 체계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더 가까워 보인다. 자원배분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시장거래와 시장가격의 역할이 매우 커져 있지만, 계획경제 또는 명령경제적 요소들도 많이 남아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안정된 체제로서 성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즉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이행 등을 보장할 법률과 제도는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학자들이 체제전환의 필수 요소로 간주한 ‘자유화’에 못 미치는 제한적 시장화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의 북한은 체제전환 초기 단계에

27) 북한의 비공식 사경제의 실태 및 성장요인에 대해서는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참조.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전환은 정부당국이 제도 개혁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반주민과 일부 관료들이 기존의 공식 제도와 이념을 위반해 가면서 자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reform from below)’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런 상황은 일견 특이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개혁·개방 초기에 일반주민에 의한 자생적 개혁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아래로부터 나타난 개혁을 나중에 추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시킬 수 있었다.

최근 북한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소간 개혁적인 정책이 실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혁 내용이 제한적·소극적이고 전면적 실행 여부도 불투명해 보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시장화와 사유화를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sup>28)</sup>

## 나. 2000년대 초 이후 경제회복 요인<sup>29)</sup>

북한의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경제실적은 어떠했을까? 19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대략 2000년을 전후해 대기근은 종료되고 전반적 경제 상황도 회복세를 보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회복세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침체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의 북한 성장률 추정 결과가 바로 그러한 관측을 대표한다. 그러나 UN 산하기구들이 참여한 어린이 영양상태 조사 결과, FAO/WFP의 식량 생산량 추정 결과, 북중무역의 급속한 증가, 이동전화의 빠른 보급, 그 외에 북에서 전해진 각종 소식 등,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북한의 경제 회복이 계속되었음을 시사하는, 무시하기 힘든 증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8) 양문수,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주: 한울, 2014), pp. 55~84.

29) 필자는 2000년대 초 이후 북한의 경제회복에 대해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앞선 논의를 대폭 축약 및 재구성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김석진,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pp. 33~88; 김석진, “최근 북한 경제 실적 재평가,” 『Korea Policy』, Vol. 21 (코리아정책연구소, 2013), pp. 85~92; 김석진, “북한의 장기 경제 성장 실적 재평가,” pp. 155~182 참조.

2000년대 초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다소 나아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적 요인이 북한의 경제실적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인 것 같다. 먼저 북한이 대기근에서 벗어나는 데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및 기타 국제 사회의 식량원조가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0년 이후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에 따라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 크게 증가한 것, 또한 같은 시기에 북중 무역이 활성화된 것도 북한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먼저 2006-07년에 일본의 대북제재로 북일교역이 중단되고, 이어서 2008년부터 남한 정부의 식량 및 비료 지원이 끊겼으며, 2010년에는 천안함 사태 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되었다. 일반적 통념은 북한이 자체적 개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런 남북 및 대외경제 관계의 악화로 북한 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다. 2009년 연말 북한당국이 실시한 화폐개혁이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일으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전망은 더욱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도 북한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 사정이 계속 좋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2011년 연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일반적 통념도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북한의 경제회복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북일무역 중단과 남북경협 감소의 악영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북중무역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처음에는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지원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해외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북한이 대중국 광산물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음이 분명해졌다.<sup>30)</sup>

한편, 그 동안 북에서 많은 소식이 꾸준히 전해진 결과, 단지 외부적 요인만이

30) 김석진, “북중경협 확대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아니라 내부적 변화도 북한경제의 회복을 가져온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일반적 통념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지칭되는 체제적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주민에 의한 사경제의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사경제의 발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본격화된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된 현상이며, 그 추세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특별히 더 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물론 과거에도 사경제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일반주민의 자구적 생계 대책에 불과한 것이어서 단지 현상유지만 가능할 뿐, 장기적 경제성장을 이끌 만한 힘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비록 속도는 느리더라도 사경제가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최근 20여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많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 비공식 사경제(소기업, 자영업, 개인농 등)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발휘하여 빈곤감축과 전반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공식 사경제의 성장 배경이 개발도상국 어디에서나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사경제는 공식적 법률과 제도의 틀 내에 있지 않아 사유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북한의 사경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사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과 ‘기업가 활동’이라는 두 가지 요인 덕분이었으며, 오늘날 북한에서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북한이나 저소득 개도국의 보통 사람들은 자본과 기술이 없으므로 제조업 같은 복잡하고 수준 높은 활동에 종사하기 어렵다. 대신에 그들은 사경제 활동을 벌이기가 훨씬 쉬운 서비스 부문, 특히 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 같은 업종에 먼저 뛰어 들었다. 이런 업종은 생산이 아니라 유통 활동에 불과해 경제성장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이는 지나친 과소평가일 수 있다. 유통업 같은 업종이 제조업에 비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힘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역시 경제적 복지와 국민 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이며, 이런 서비스 활동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31)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pp. 69~118.



비롯해 물질적 상품 생산 부문의 발전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 서비스 부문이 지나치게 억제되어 있었으므로 국영경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그 반동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사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타 부문의 발전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공식 사경제의 활성화는 북한에서도 초보적이거나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북한 사람들의 사경제 활동, 즉 개인 장사와 개인농사는 대부분 보잘것없는 생계형 활동이지만,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개인사업을 창업해 꾸려간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기업가 활동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와 같은 수동적 경제주체가 아니라 능동적 경제주체로 나선 셈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업가 활동은 본원적 활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북한에서도 그러한 활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겨우 생계를 해결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사업형 기업가로 성장했고 이제는 신흥 부유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다. 물론 아직도 북한에서는 정치적 억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가들은 국영 기업이나 관료조직과 연계하여 ‘붉은 모자’를 쓴 채 활동한다고 한다. 개인사업가들이 붉은 모자를 쓴 채, 즉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의 형식으로 위장한 채 활동하는 것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다.

사경제의 발전에 대해 북한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북한당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사경제를 억압하고 국영 계획경제를 복원하려 할 것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북한당국은 그런 시도를 종종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경제를 억압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허용하며 활용하는 정책이 더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2002년 7.1 조치 이후 사경제로부터 재정수입을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재정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영기업과 국가기관들도 사경제 부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거래가 그들 조직이 살아가는 데 큰 중요성을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경제가 중요한 재정 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국영경제와 사경제 간의 공존·공생 관계가 성립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당국은 사경제에 대해 대체로 유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IV

## 결론과 전망


70년 전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대체로 경제적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 상당 기간 동안 모범적인 사회주의 산업국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인식이 지나친 과대평가였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경제의 이상을 열심히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허술하고 무계획적인 명령경제를 운영했을 뿐이며, 결국 낙후하고 고립적이면서도 원조의존적인 경제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1990년대 들어 북한경제는 결정적 위기에 빠졌는데, 소련의 원조성 무역의 중단과 자연재해가 주된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독재체제의 경제적 통치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도 중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후 북한당국은 적절한 경제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정치적 통제와 억압에만 주력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 개발을 계속하는 등 대체로 강경 대결노선을 고수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남한, 중국 등 외부의 원조와 경제협력에 의존하여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영 계획경제가 상당 부분 허물어지고 난 후, 많은 북한주민과 일부 관료들이 공식 제도와 이념을 위반해 가면서 사경제·사기업 활동에 뛰어들었으며, 이러한 사경제의 발전 덕분에 비록 느리게나마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나 북중경협 같은 대외경제 관계도 북한의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했지만, 북한 내부에서 사경제와 시장을 지향하는 뚜렷한 체제적 변화가 나타난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실적은 중국과 베트남 같은 성공적인 개혁·개방 사례에 비하면 훨씬 미진하다. 북한당국은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장하는 근본적 제도 개혁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국영경제의 작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소극적·제한적 개혁만 실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회복은 단지 저성장이었을 뿐, 고도성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북한당국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다수 지정하는 등 개방 실험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군사적 대결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전환에 따라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위축되기 시작한 점도 중요한 환경 변화이다. 북한당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북한경제는 앞으로도 기껏해야 저성장 상태에 머물 것이며, 더 자유로운 사경제 활동을 원하는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 〈참고문헌〉

-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서울: 해안, 2001.
-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_\_\_\_\_.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전망.” 김수행·신정완 편.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북중경협 확대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월호, 2013.
- \_\_\_\_\_. “최근 북한 경제실적 관련 주요 쟁점.” 이석기 외. 『북한 경제 쟁점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2013.
- \_\_\_\_\_. “최근 북한 경제실적 재평가.” 『Korea Policy』. Vol. 21, 2013.
- \_\_\_\_\_.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주: 한울, 2014.
-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해남, 2002.
- \_\_\_\_\_.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20권 1호, 2011.
- \_\_\_\_\_.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2012.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서울: 선인, 2005.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 \_\_\_\_\_.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주: 한울, 2014.
- 오원철. “북한경제 망한 까닭.” 『신동아』. 1995년 1월호.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경제: 변화와 지속.” 체제통합연구회 편. 『북한의 체제와 정책: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지속』. 서울: 명인문화사, 2014.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 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전홍택·박 진, “북한 경제발전의 역사적 평가.” 차동세·김광석 편.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정은이.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2012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자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 좋은 벗들 엮음.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2010』. 서울: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 Baumol, William J, Robert E. Litan, and Carl J. Schramm. *Good Capitalism, Bad Capitalism, and the Economics of Growth and Prosper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Bergson, Abram. “How Big Was the Soviet GDP?”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39, Issue 1, Spring 1997.
- Fischer, Stanley and Alan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Autumn 1991.
- Gregory, Paul R.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Harrison, Mark. “Coercion, Compliance,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Command Econom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55, No. 3, 2002.
- Kim, Byung-Yeon,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 No. 3, September 2007.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Weitzman, Martin. “Soviet Postwar Economic Growth and Capital–Labor Substit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 4, September 1970.